

(2021.11.1. 월) 문해력 '최하위' 한국(한겨레)

나는 종합일간지' 몇 종을 꼼꼼히 보는 편이지만 주식, 부동산, 자동차 관련 기사는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공매도? 180마력? 이런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내 생활과 무관해서 큰 불편은 없다.

그래도 답답한 표현이 있다.

평수. 넓이를 제곱미터로 표현하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지만, 나처럼 평수 개념에 익숙한 사람은 25평이 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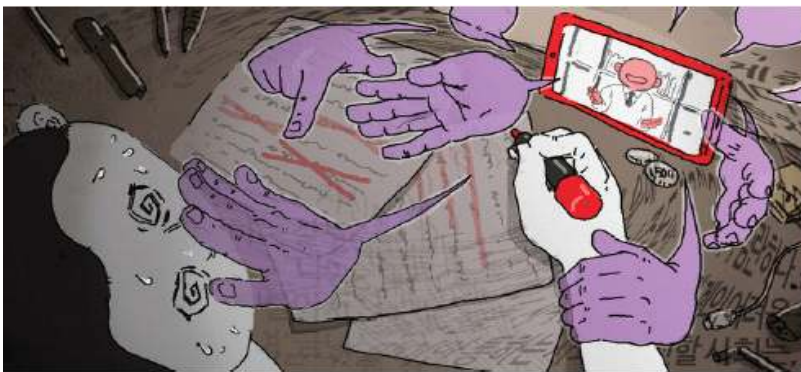
84㎡는 감이 안 온다. 자량은 아니다.

다만, 세상 모든 문장을 어찌 다 이해하겠는가.

위의 내 경우처럼 글자는 읽지만 문장을 이해하지 못할 때, “문해력(文解力, literacy)이 낮다” 고 한다.

공매도(空賣渡, short selling)를 읽을 수는 있지만 “주식을 실제로 갖고 있지 않거나 갖고 있어도 상대방에게 인도할 의사 없이 신용 거래로 환매(還買)하는 것”이라는 문장은 이해하지 못한다.

문해력은 글자를 보는 행위가 아니라 문장을 실제로 이해하는 능력으로, 인간의 사고방식을 좌우한다.



기십대 청년이 '정화진의 융합'을 먼저 읽고 그린다. 김우석

요즘은 문장뿐 아니라 특정 분야에 대한 인식으로서 생태 문해력, 이미지 문해력,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문해력 등 다양한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문자 읽기와 문장 이해는 전혀 다르다.

한국은 훌륭한 한글 덕분에 문맹률 1% 이하의 세계 최고의 글자 해독 국가지만, 문해력은 반대다.

조사 시기와 연령대마다 다르지만, 문해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혹은 중간 이하라는 게 중론이다(20여 년 전, 최하위 통계가 있었다).

한국은 '지식 강국' 과 거리가 멀다.

아마 한국사회의 문해력을 가장 실감하는 집단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일 것이다.

초·중·고, 대학 모두 마찬가지다.

교실 붕괴, 강의실 붕괴는 이미 오래전 일이다.

낮은 문해력은 소통과 직결되므로 사회 갈등의 주원인이 된다.

사회 갈등은 총기 난사와 인종 차별로 얼룩진 미국, 내전 중인 지역들, 한국 모두 심각하지만 우리의 갈등은 약간 다른 양상인 듯하다.

그들은 '진짜' 사회 갈등을 겪고 있고, 우리는 문해력 부족으로 인한 의미 없는 소모전인 경우가 많다.

더구나 이를 진보-보수라는 내용으로 소위 식자층이 주도하고 있으니 더욱 심란하다. 문해력은 인간의 조건, '상식 사회'의 초석이다.

낮은 문해력은 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하고 지적 양극화,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 수많은 문제를 낳는다.

말이 안 통하는 사회를 대신할 사회는, 없다.

분단(分/斷) 체제의 기반은 이분법이고, 이분법은 문해를 불가능케 하는 가장 쉬운 논리다.

말할 것도 없이, 한국의 낮은 문해력의 근인은 분단과 식민주의다.

'건국' 이후 그리고 지금까지도 남한 사회 문해력의 기준은 외부였다.

반미, 반북, 친일... 이와 관련한 언설이 그 자체로 '생명줄' 이거나 '反(반)국가'인 사회에서 무슨 문해력을 논하겠는가.

국가보안법은 국가가 개인에게 행사하는 폭력이라는 점에서, 인간과 지식 모두를 압살해왔다.

그러나 색깔론도 국가보안법도 여전히 활발히 작동하고 있다.

1965년 3월, 소설가 남정현은 단편 '분지(糞地)'를 남한의 문예지 <현대문학>에 발표했는데, 작가도 남한 당국도 모르는 사이에 두 달 뒤 북한 노동당 기관지 <조국통일>에 전재되었다.

작가는 '총일기업사'라는 중앙정보부 을지로 대공 분실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작품과 관련한 작가 구속은 일제 시대에도 없던 일이다.

이처럼 사실관계 자체가 조작되는 상황에서 문해력은 사치일 것이다.

'라떼'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토록 진영 논리가 판칠 줄 몰랐다.

정권 탓이 아니다.

그간 한국 사회에 내재하고 있던 무지의 힘이 개인의 이해와 맞물려 폭발한 것이다.

중앙정보부 시절 양희은씨의 노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금지곡이었다.

"사랑이 안 이루어진다는 부정적 사고방식" 이것이 이유였다.

이해하지 않으려고 작성한 경우다.

지금은 개인이 스스로 이해를 거부한다.

문해력이 없는 사회에서는 그것도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당대 한국사회의 문해력은 그 낮은 수준조차 8·15, 미군정, 한국전쟁 때보다 후퇴했다.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는 사람과의 대화처럼 괴로운 일도 없다.

게다가 위계 관계 때문에 그런 재앙을 피할 수 없을 때의 스트레스와 분노는 몸의 면역력을 망가뜨린다.

소통 불가능성은 일상이 되었다.

전광훈, 강용석, 김어준씨 등 소위 관중으로 불리는 이들은 자신의 생계와 명예(?)를 위해, 말이 안 되는 소리로 도발한다.

그들은 허언으로 돈을 챙기는 이들이다.

관련해 “ ‘다섯 줄’ 만 넘어가도 읽기 힘들어하는 아이들 ” (<한겨레> 인터넷판, 2019년 8월 13일)이 제시한 대안을 보자.

“ ‘북튜버(book+youtuber)’ 가 대신 읽어주는 책보다는 아이 손으로 직접 종이책 만져 보고 소리 내어 읽어보아야 한다.” 중요한 지적이다.

모든 공부는 몸과 텍스트의 달음과 느낌, 접촉을 통해 몸으로 익혀야 한다. 피아니스트는 피아노를 보는 것이 아니라 피아노와 한 몸이 될 때까지 친다.

반면, 공부는 남이 하는 것을 보는 시대가 되었다.

대책을 찾기는 쉽지 않은 듯하다.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에 전기(스마트폰, 컴퓨터 등)와 매개를 거부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산업자본주의 시기에는 몸을 써서 노동(공부)을 함으로써 사회적 성원권을 인정받았다.

잘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노동은 미덕이었다.

지금은 소비 주체의 시대다.

소비가 곧 노동이다.

온라인 공간에 오래 머물면서 자기 시간을 포털 사이트에 제공하는 소비행위가 공부(검색)가 되었다.

이 대세를 거스를 기력이 있는가.

하향평준화는 필연이다.

‘긴 글’ 이나 조금만 익숙하지 않은 문장에도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근본적으로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셈이다.

차이가 있다면, 이를 직면하고 보완하려는 사회가 있고, ‘정보기술(IT) 강국’이라는 언설로 문제 인식조차 없는 사회가 있을 뿐이다.

한국은 후자의 대표적인 국가다.

“학문의 한자 표기는 ‘學問’ 이다”, “셰익스피어는 배우였다”, “<자산어보>에는 ‘백상아리(백상어)’ 로 추정되는 어류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이처럼 정보에 가까운 문장은 문해력 논란이 적다.

그러나 “고대(古代)에 대한 지식은 대부분 근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여성과 남성은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 규범이다”, “기후위기는 자연을 대상화한 결과다”, 이때는 문해력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통념과 달리 문해력은 지식의 정도보다는 가치관과 태도의 영향이 크다.

초등교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학력(學歷: 배우다 학 지내다 력), 학력(學力: 배우다 학, 힘 력)과 무관하다. 남녀, ‘페이와 마초’ 불문, 자신을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이미 문해의 영역에 들어오기 어렵다.

최근 나는 건설자본주의 비판과 빈집 재활용에 관한 글을 썼는데, 곧바로 돌아온 반응은 “그러니까 오세훈을 찍지 말라는 거죠?” 였다.

어느 유명 남성 지식인이 성폭력 가해자를 지나치게 두둔하여, 나는 피해자를 돕는 몇몇 이들과 함께 그 남성을 ‘설득’ 하는 편지를 썼다.

그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대한민국에 나만한 문해력을 갖춘 사람이 없는데, 내가 당신들이(여성들이) 하는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니, 이건 당신들 잘못이다.”

문해력은 이해력이다.

그런데 ‘이해’ 의 의미부터가 매우 복잡한 문제다.

얕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의미의 이동 즉 차이(差移) 그리고 유착(流着)의 반복, 즉 융합이기 때문이다.

이해 과정에서 이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해는 본디 불가능한 일이다.

이때 위로가 되는 말이 있다.

마르크스가 죽기 전에 했다는 “나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다.”

마르크스주의자체가 교조적으로 수용되기 쉽고 그는 레닌처럼 정치가가 아니라 사상가였기에, 또한 당시 수정주의 논란이 컸기에, “나의 마르크스주의는 어디로?” 같은 한탄이 있을 것이다.

문해력은 자신의 가치관과 무지에 대한 자기 인식의 문제다.

때문에 문해력 향상의 첫걸음은 에포케(epoche, 판단 정지)이다.

“나는 모른다”가 공부의 시작이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해력부터 의심해야 한다.

물론 우리 몸에는 이미 많은 의미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무지라는 가정을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부가 중노동인 이유다.

잠깐의 판단 중지. 그 잠깐의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른다.

얕은 자기 진화의 과정이지 시비를 판단하는 행위가 아니다.

지식을 정보로 아는 이들은 타인을 ‘가르치려 들지만’, 아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들은 우리를 가르친다’ .

(2021.11.2. 화) 강윤희의 '소시오패스' 발언을 생각한다(한겨레)



유력(?) 대선주자의 부인이자 정신과 의사인 강윤희씨의 발언을 듣고 경악했다.

전문가 단체의 즉각적 반박과 징계를 기대했으나 정적만 흐른다.

정신질환 가족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두 가지만 지적한다.

첫째, 강씨는 부모의 양육이 정신질환 성향을 유발한다는 편견을 조장한다.

많은 병이 유전자와 환경의 우연한 조합에 의해 생긴다.

그저 '운이 없어서' 생긴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런 설명에 만족하는 환자는 없다.

인간은 원인을 따지는 동물이다.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벌어지면 더욱 그렇다.

암환자는 자기를 책망하거나, 가족을 탓한다.

그런 태도가 도움이 될 리 없다.

의사는 어떻게든 환자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 애를 먹는다.

정신질환은 반대다.

의사가 색안경을 끼고 부모를 바라보기 일쑤다.

예전에는 부모가 야단맞거나 모욕당하는 일도 많았다.

이제 그렇게 무지한 의사는 드물지만, 아직도 은근한 책망, 냉담함, 취조에 가까운 가족 사 캐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는 부모가 적지 않다.

“따뜻하고 화목한부모님 밑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 지 못해 “소시오패스”가 됐다는 강윤희씨의 주장은 비과학적일뿐더러, 불우하고 빈곤한 환경에서 자란 모든 사람을 싸잡아 비난하는 차별과 혐오의 언어다.

어떤 어려운 병에 걸려도 시간이 지나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싸워갈 힘을 얻는다.

그러나 정신질환이나 발달장애 등 사회적 낙인이 심한 질병에는 시간조차 도움이 되지 않는다.(질병이냐 아니냐는 논외로 하자.)

정신의학과 심리학은 낙인을 조장한 역사를 갖고 있다.

가족의 문제로 정신질환이 생긴다는 서사는 지금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된다.

환자는 부모의 양육에서 자기가 병에 걸린 이유를 찾으려고 성장과정을 이 잡듯 뒤지고, 부모는 하루도 빠짐없이 죄책감에 시달린다.

일부 정신과 의사와 심리상담가는 정신질환 가족의 삶을 지옥으로 만든다.

둘째, 강씨는 직접 보지도 않은 사람에게 모욕적인 진단명을 갖다 붙였다.

전문가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짓이다.

그렇게 진단이 쉬우면 누가 정신과를 찾겠는가?

인공지능(AI) 진단기를 만들고 정신과 의사는 모두 보따리를 싸면 될 일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정신질환이 악화되었을 때 가장 힘든 것은 입원이 어렵다는 점이다.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아무리 상태가 나빠도 스스로 정신병동에 입원하겠다는 환자는 없다.

보호자와 의사는 발을 동동 구른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이지만,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한 환자의 의향을 어디까지 존중할 것인가?

이 문제를 악화시킨 요인이 있다.

의사들이 권력과 돈에 양심을 팔아 정신질환 진단을 뒤집어쓴 역사다.

우리나라도 과거 군사정권 시대에 말 안 듣는 사람을 정신질환자로 몰아 강제 입원시킬 목적으로 정신보건법을 개정하려고 했다.

그런 일에 손을 빌려줄 정도로 몰지각하고 비양심적인 의사가 얼마나 될까?

극소수다.

극소수의 일탈로 수많은 환자와 양심적인 의사들이 고생하는 꼴이다.

자기 남편과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을, 제대로 만나보지도 않은 채, 정신질환자라는 “의견을 개진한” 행위는 허위진단을 뒤집어씌워 멀쩡한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래도 서울대 나온 정신과 의사의 의견이니 일말의 근거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서울대 출신 의사 중에도 백신을 맞지 말라거나, 코로나가 감기에 불과하다거나, 비타민 시(C)로 모든 병을 고친다고 떠드는 사람이 있다.

강윤형씨가 사과하고 자중하여 그런 엉터리들의 명단에 끼지 않기를 바란다.

(2021.11.3.수) KT먹통, 아직도 못 고친 외양간(중앙일보)

서울 광화문 지하에는 대형 통신구가 있다.

15년 전쯤에 한 번 가 본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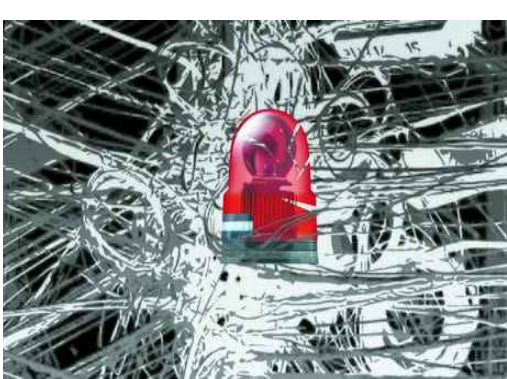
KT 사옥 지하와 연결된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지름 50 ~ 60cm가량의 검은색 케이블이 층층이 쌓여 길게 뻗어있다.

흐릿한 불빛 아래 케이블을 따라 걷다 보면 영화 속 세상에 들어선 거 같았다.

당시 안내를 해주던 KT 직원이 광화문 통신구는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통신 시설 중 하나로 사고가 나면 나라가 멈출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주던 기억이 난다.

광화문 지하의 커다란 통신케이블처럼 생활이 편리해질수록 이를 위한 인프라가 더 많이 필요하다.

관리도 만만치 않다.



통신망은 특히 더 그렇다.

사고가 나면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통신사와 정부는 통신시설을 A~D등급으로 나눠 관리한다.

A등급은 피해가 발생하면 수도권·영남권 등 권역 단위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시설이다.

B등급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C등급은 3개 이상의 시·군·구에 영향을 미치는 곳이다.

D등급은 A~C급이 아닌 시설인데 대체로 단일 시·군·구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다.

KT 먹통 사태는 통신 사고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대로 보여줬다.

카드결제와 원격수업은 멈췄고 증권거래는 중단됐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던 세계바둑대회는 연기됐다.

점심 장사를 망친 상인도 상당수다.

심리적 불안도 컸다.

KT 가입자는 이동통신 1750만 명, 초고속인터넷 940만 명, 시내전화 1002만 명. 인터넷 전화 317만 명, IPTV 900만 명 등 중복포함 4900만 명에 달한다.

구현모 KT 대표가 사과문을 내고 피해 보상을 약속했지만, 논란은 끝이지 않는다.

알맹이 없는 보상 약속이라며 분통을 터뜨리는 이도 많다.

2018년 11월 24일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서울·경기 고양시 일대에 통신 장애가 났다.

전화·인터넷·카드결제시스템이 먹통이 됐다.

아현지사는 D등급의 시설이었는데도 피해는 컸다.

사고 한 달 후인 그해 12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망 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통신구 소화설비 구축, 통신시설 점검 강화, 통신 우회경로 확보 의무화, 통신재난 발생 시 통신사 간 무선통신망 공동이용(로밍) 등이었다.

이를 위해 관련법도 개정됐고 통신·재난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통신 재난관리 심의위원회'도 만들어졌다.

이번 KT 먹통 사태에 아현지사 사태를 계기로 만들었던 대책은 작동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무선통신망 공동이용이 없었다.

'로밍이 왜 없었느냐'는 질문에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당시 재난 로밍 서비스는 네트워크 엣지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었고, 이번엔 KT 라우터 경로설정 오류가 코어 네트워크까지 번지는 바람에 대책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말이 어려운데 요지는 아현지사 당시 만들었던 대책이 이번 같은 경우엔 적용 안 된다는 거다.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철저히 관리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내놓은 대책이 그저 미봉책이었다는 고백에 다름없다.

재난문자 알림이나 재난안내 방송도 없었다.

어느 건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나왔으니 검사받으라는 문자가 수시로 날라오는 세상인데 아무런 안내가 없었다.

과기부는 먹통 사태가 발생한 지 30분가량 돼서야 정보통신사고 위기경보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주의' 단계를 발령하는 데 그쳤다.

과기부는 "당시 디도스(악성코드를 이용한 서비스 거부)공격이라고 해서 2단계 발령 후 사고가 나면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문자도 발송할 수 있었는데 복구가 시작됐다고 해서 발송하지 않았다고 한다.

철저한 원인 규명·보상과 함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난 안전, 특히 사이버 재난 안전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이 진행 중이다.

중앙·지방 정부가 함께 사고 위험이 있는 2만 3000개소를 선정하여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물리적 공간 중심인데 앞으로 디지털 공간과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이버 안보 대응 능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우리 일상과 경제활동이 블랙 아웃을 겪는 것은 절대 가볍지 않은 일” 이라고 했다.

국회는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맞는 말이고 필요한 일이다.

정부는 변명하는 듯한 해명만 내놓을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소를 잃고 외양간을 못 고쳤지만 그래도 다시 외양간 고치기에 나서야 한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실물경제 효과

(단위: 2021~2050년 연평균 %포인트, 자료: 한국은행)

	2도	1.5도
지구 평균온도 상승 억제분		
GDP 성장률	-0.08	-0.32
소비자물가 상승률	0.02	0.09

(2021.11.4.목) 탄소중립 늦출수록 부담 커진다는 한은 경고, 산업계 새겨야(경향신문)

한국이 '2050 탄소중립' 을 이루기 위한 온실가스 저감 과정에서 친환경 기술로 대응하지 못하면 성장을 둔화와 물가 상승 등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8일 내놓은 '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대응 방향' 보고서를 보면 205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 대비 100% 감축하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평균 0.25~0.32% 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0.09%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배출규제 강화 등에 따라 기업의 생산비용이 상승해 제품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50년 탄소 배출량을 70%만 감축하면 GDP 성장률 0.08~0.09% 포인트 하락, 물가상승률 0.02% 포인트 상승 등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관측됐다.

탄소 배출량을 2020년 6억7000만t에서 30년 뒤 100% 감축하는 탄소중립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평균기온을 1.5도 상승 이내로 막는 것이다.

배출량을 70% 감축하면 2도 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거나 "방향은 맞지만 속도는 고민해야한다" 는 등 반론을 편다.

실제 한은 보고서도 탄소 배출량을 100% 줄일 때보다 70% 줄일 때 성장을 하락 충격이 덜 한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배출규제 등 탄소중립 이행 리스크만 모형을 만들어 계량화했을 뿐이다.

탄소중립을 안 했을 때 충격은 계산하지 않았다.

한은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등 물리적 리스크는 수치화하지 못했다.

(탄소중립을 미루다가는) 이행 리스크보다 훨씬 큰 충격에 직면할 수 있다" 고 전했다.

영국중앙은행(BOE)은 저탄소 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2050년 GDP가 7.8% 하락한다는 예측을 내놨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강수량 변화, 해수면 상승, 자연재해 발생이 노동 및 농산물 생산성 감소, 물적자본 파괴, 공급망 차질 등을 초래하는 물리적 리스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중앙은행(ECB)도 기후변화 물리적 리스크로 2050년 GDP가 3%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인류의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해 탄소중립은 미룰 수 없다.

탄소중립을 이행하면서 생기는 리스크보다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닥칠 물리적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

정책 목표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계의 실천이다.

기업들은 탄소배출 저감 노력과 함께 친환경 기술 개발, 신산업 투자에 힘써야 한다.

다른 선진국들은 몇 발짝 앞서 가고 있다.

탄소중립 이행 기업에 대한 금융, 세제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또한 필요하다.

(2021.11.5.금) 지구온난화, 이 정도는 알아두자(티타임즈)



PARIS2015
COP21-CMP11

'지구의 운명을 결정할 2주'라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가 11월30일부터 2주간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 가운데 기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온갖 도표와 수치가 등장하는 탓에 어렵다.

그래서 뉴욕타임스의 환경전문기자 저스틴 길리스가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기사를 소개한다.

Q 지구가 얼마나 뜨거워지고 있나?

“ 지구 온도를 처음 측정하기 시작한 188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지구 온도는 1.7도 상승했다.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지구 표면적을 생각한다면 어마어마한 수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40만개가 매일 전 지구에서 폭발할 때 발생하는 열과 동일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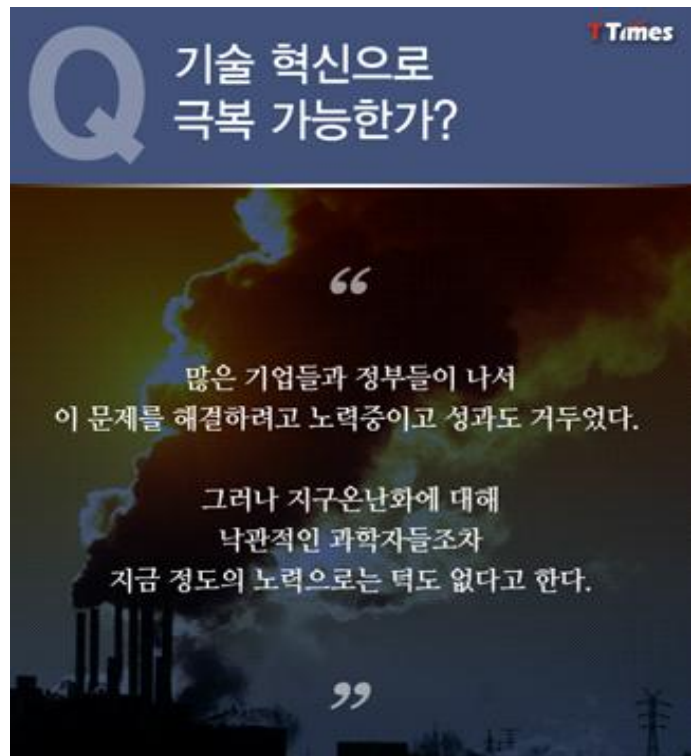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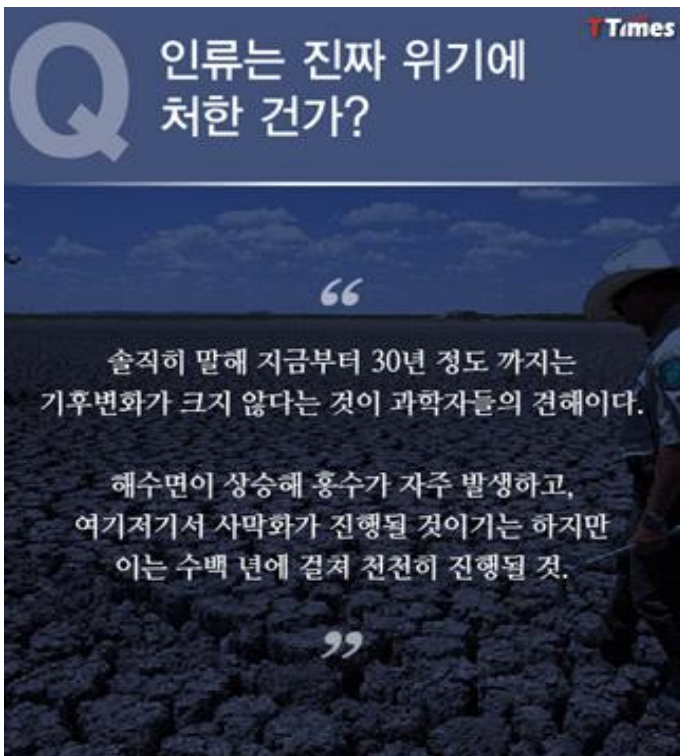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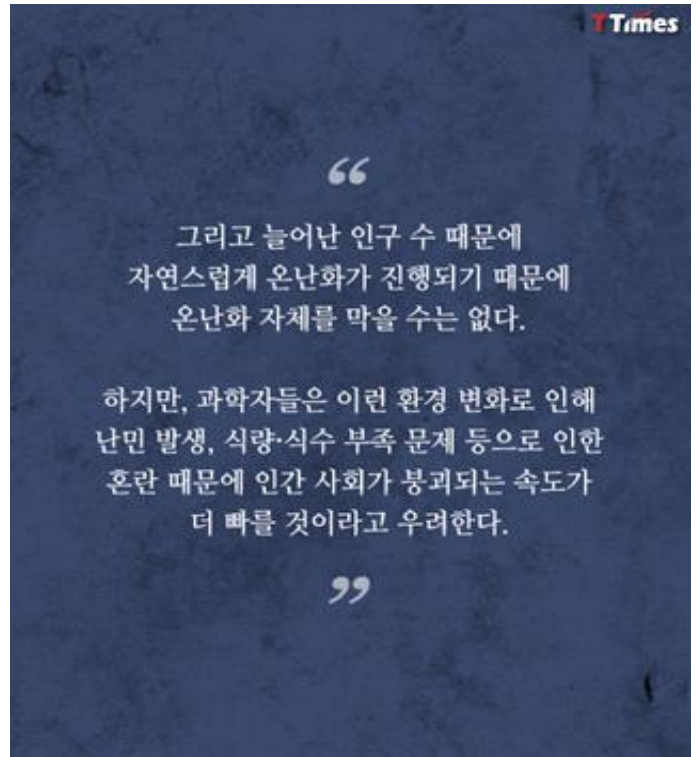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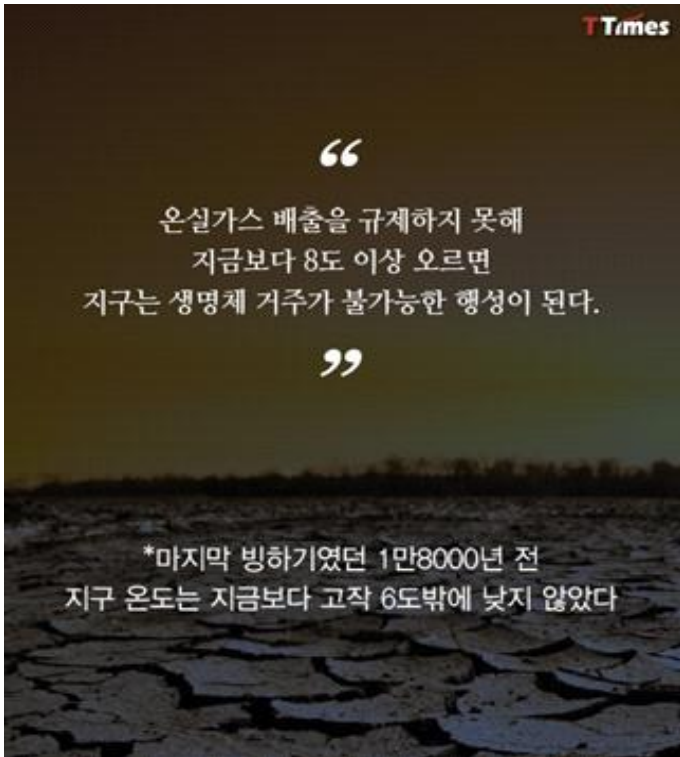
Q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은 얼마나 상승하나?

“ 중요한 것은 '얼마나' 상승하느냐가 아니라 '어느 속도로' 상승하느냐이다.

현재 평균 해수면 상승 속도는 100년에 30cm 수준이지만 지구온난화 속도로 보면 조만간 10년에 30cm씩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약 2400cm 정도 더 오르면 세계 주요 도시가 모두 물에 잠긴다.

”



Q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있기는 한가? Times

“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지구가 생각보다 지구온난화에 민감하지 않고 각종 식물과 동물들이 온난화에 맞춰 잘 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지구 곳곳에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시나리오는 그리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

Q 그런데 이 예측들이 믿을 만하기는 한 것인지? Times

“

지구가 온실가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은 다양한 분야의 과학에서 증명됐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Times

“

대체에너지 연구에 투입되는 비용은 요구 수준에 비해 4분의1 수준. 농작물에 대한 연구 역시 기후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기술이 지구온난화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

”

Times



“

그러나 반드시 이들이 이익만을 본다고는 할 수 없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산불은 러시아와 캐나다 산림을 매년 수만 에이커씩 태워 없애고 있다.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하면 러시아와 캐나다는 해동된 땅을 기후 난민들에게 내줘야 할 가능성도 있다.

”


Q 지구 온난화로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다는데? T Times

“
있다.
국토 대부분이 푹푹 얼어붙은 땅인 러시아와 캐나다가 이익을 본다.
기온이 올라 땅이 녹으면 그 땅에서 농사도 짓고, 광물도 캐고, 집 짓고 살아도 된다.
이것이 러시아가 지구 온난화 방지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시베리아 전경


Q 그럼 우리 뭘 하면 되나? T Times

“
알려진 대로, 쓰지 않는 플러그 뽑기, 전등 끄기 등등 에너지 절약을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행기를 덜 타야 한다. 1년에 비행기를 한두 번만 덜 타도 다른 에너지 절약 활동보다 더 많은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Q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는 한가? T Times

“
정부와 기업 쪽 움직임을 보면 희망이 있다. 교황까지 나서서 지구온난화를 걱정하고 있고, 대기업들의 주도로 전기차를 비롯한 저탄소 기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행동을 보면 희망이 없다.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몰라서 하는 에너지 낭비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T Times

그리고 환경보호는
'국가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사실.

T Times = 지희령 디자이너